정부 뒷짐진 국가기념일

학생독립운동 정부 주관행사 거의 없어 전국화 '헛구호'

일제에 저항해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족운동인 광주 학생독립운동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지난 2006년 국가기념일로 격상됐지만 아직도 기념식 외에 정부 주관 행사가 거의 없고, 상당수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기념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격상됐지만 '무늬만 국가기념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 주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오전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과부 차관과 부산시 정무부시장, 교사·학생 등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기념식 행사에 교과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해 갈수록 행사의 격이 떨어지고 있다.

매년 11월 3일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은 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라는 측면에서 교과부 주최로 중앙단위 행사를 하되 각 지방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기념일 승격 첫해인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순으로 2022년 제주까지 매년 다른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그러나 기념식 행사 외에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충북·경북 등은 교육청 차원의 기념식을 가졌으나 전북과 제주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념식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각 시·도별로 자체 기념식을 가지라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념식을 갖지않은 시·도의 경우 전교조 등이 자체적 행사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관련 관련 행사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관부서를 지정해 관련 부대행사를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독립운동이 제 2의 3·1절 운동이었던 것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시교육청 차원뿐 아니라 학교별로도 행사를 하게끔 독려하고 있다"며 "학생독립운동을 더 알려 전국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행사가 더 많아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서 학생운동 기념식

광주시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 교정에서 '제7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운동 유공자 및 동지회 회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생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사범학교 출신 선배들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 제막식이 3일 오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사범·사대·교육대 총동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광주교대 대학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밖에도 배종국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장과 유족회원,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생존자인 노동훈·옥대호 선생 등도 참석했다. /정상필기자 camus@

3일 오전 광주일고에서 열린 '제7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자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를 하고 있다.〈왼쪽〉 이날 오후 광주교대에서 열린 학생운동기념탑 제막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정섭 담양군수 법정 구속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다시 직무 정지

인사청탁과 자재계약 등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60) 담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병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의 아들(36)과 모 업체 간부 이모(51)씨, 공무원의 부인 이모(46)씨, 산하기관 공무원 부인 송모(50)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을 적용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인사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민의 신뢰를 훼손해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대부분 친족과 관련됐고 이 군수가 직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 있는 점, 수뢰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이 군수는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군수는 담양읍장 시절 또는 군수에 취임한 뒤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부하 공무원 등 4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묘지 관리소장 내정설 항의

5월단체, 청와대·보훈처에 서한

5·18 민주화운동유족회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들은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 내정설'〈본보 3일자 7면〉과 관련, 3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5월 관련단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당사자로부터 '2·3차 공개 모집 당시 후임 인선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뽑기 위해 그랬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공모에 청와대가 정권창출 과정에 기여한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차 공모 당시 국가보훈처는 정치적 전력을 이유로 신청자 중 한 사람을 탈락시켜놓고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인사를 임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관리소장 자리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와 국가보훈처는 즉시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계획을 접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는 해명이 없을 땐 관리소장 임용과 직무수행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애완용 토끼 죽자 판매점 항의 소동

쌍나팔

○…애완용 토끼가 잇따라 죽자 이를 판매한 판매점을 찾아 항의하던 30대 여성이 새장 등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동물들이 탈출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북부경찰은 3일 애완동물 판매점에서 소란을 피운 A(여·3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 B(여·46)씨의 애완동물 판매점에서 "애완용 토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항의하며 매장에 있던 새장 등을 던졌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일주일 사이 토끼 4마리가 잇따라 죽었다"며 B씨가 병든 토끼를 팔았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제대로 기르지 못한 탓"이라고 반박했는데, 담당 경찰은 "이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앵무새 등이 탈출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고 전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상거래 사기 주의보

구매자 속여 5천만원 갈취 등 범죄 잇따라

인터넷 매매사이트 등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려다 사기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남부경찰은 3일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오토바이나 카메라 등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인터넷 P사이트에 '오토바이 싸게 팝니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장모(23)씨로부터 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친구 신분증으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든 것은 물론 배송 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1년6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목포경찰은 3일 인터넷 오토바이 판매사이트 등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초부터 인터넷 오토바이 판매사이트 등에 중고 오토바이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장으로 입금된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많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

보성 실종 여성도 숨진 채로 발견

보성 앞바다에 놀러온 뒤 4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남녀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마을 앞 해상 100여m 앞 해상에 떠 있는 박모(여·27)씨의 사체를 산책중이던 이 마을 주민 윤모(여·5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을 인양, 유가족 등을 통해 박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는 박씨와 동행했던 박모(27)씨의 사체가 고흥군 도덕면 대공리 앞 200m 해상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직접적 사인은 익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다 바다로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